

전남도, 천일염 현대화·위생관리 304억원 투입

올해 '천일염 육성 원년' 선포 경쟁력 강화·소비자 신뢰 제고 전통대파기·수문급배수 등 지원

전남도는 올해를 천일염 육성 원년으로 선포하고 생산시설 현대화와 위생관리에 304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설비를 위한

장비 보급사업으로 전통대파기, 수문급배수, 함수정화 등 5개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동수레 자동화 기계 180대 18억원,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 47억원, 취·배수용 배관 설치 4억원, 포장재 7억원 등을 지원해 생산 환경 조성 및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천일염 유통과 수급 조절을 위해 산지종합처리장 설비에 23억원, 장기 저장시설에 9억원을 지원한다. 또 15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천일염 종합유통센터가 올해 10월 준공되면 천일염의 저장·가공·유통 기능 연계를 통해 유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원물 중심의 천일염 제품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변환을 지원하는 수출용 제품개발에 1억2000만원과 수출 마케팅 사업에 60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염전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전수조사와 찾아가는 염전 관계자 맞춤교육(5회)을 추진하고 30억원을 들여 염전 근로자 안심숙소를 건립한다.

또 심터 시설 5개소를 지원하는 등 근로 환경 개선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천일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 시설 자동화 및 안전한 제공이 중요하다"며 "올해 천일염 육성 원년으로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해 천일염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전남도, 치매환자 관리 선제적 대응 나섰다

전남형 대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 맞춤형 사례관리·치료비 지원 등

전남도가 13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도·시군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치매정책 추진과 코로나 19로 인한 3년 동안 치매관리 한계를 돌아보고 치매예방 활동과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돌봄 지원 등 전남형 치매관리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하여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고령화 사회 치매환자 수요 증가에 맞춰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추진,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안심병동 운영 내실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 치매안심마을 확대, 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으로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에 집중한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치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지원을 추진해왔다. 전남지역은 65세이상 노인 인구 12.1%인 5만 3000명이 치매환자로 노인 9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23년 후인 2045년에 14.9%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심 전남도보건복지국장은 "고령화로 치매환자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치매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전남도어촌계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 전남도수협협의회 회원들이 1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중앙회 전남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9

전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확대

'사회적재난' 추가 등 11개 항목

전남도가 이태원참사 등 사회적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보상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

전남도는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항목을 기존 11개 항목에서 사회적재난 사망,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등 4개 항목을 추가해 15개 항목으로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참사 당시 기존 보험 항목에 사회적재난이 없어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못한 점을 검토해 행정안전부와 각 보험사에 보장 항목 문제점을 건의했다. 보험사는 과거 유사한 사고 사례가 없는 경우 관련 보장항목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새로

운 유형의 재난 사고에 대비해 포괄적 사회 재난이 보장 항목에 추가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1026명의 도민에게 5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임만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피부에 와 닿는 보편성이 높은 항목 보장을 확대하면서 기존 보장 항목의 효율성도 꼼꼼히 따져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명과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일괄 가입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최황지 기자

나광국 도의원 "전남 도자업 휴업... 경영 지원 절실"

전국 생활자기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전남 생활도자 기업 등을 위한 가스비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나광국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사진)은 전라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이 너무 비싸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고물가 시대에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남 생활도자 기업들은 작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가스비 때문에 휴업과 인원 감축을 하는 등 경영난이 극심해지는 실정이다.

나 의원은 "취약계층이나 농어민에 대한 난방비 대책은 많지만,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논의조차 없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불경기에 가스비 폭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의 경우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하는 등 선제 조치를 시작했다"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라산업국, 일자리경제본부, 에너지산업국 등 관련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최황지 기자

전남도·해양수산단체 "수협중앙회 전남으로 이전해야"

전국 최대 어업인·수산물 생산지 어촌 관광 활성화 등 도움 될 것

전남 수산업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업인이 활동하는 전남으로 수협중앙회의 본사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전남도어촌계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 전남도수협협의회는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중앙회 전남이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엄철용 전남도어촌계협의회장, 박연환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협이 수산인의 이익 증진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객관적 통계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업인

이 활동하고 가장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전남에 수협중앙회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환 연합회장은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립해 실행됐고 지난 20여 년간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을 시작으로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며 "수협은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전남으로 이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귀어인과 어업인 후계자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철용 협의회장은 "지역 불균형 완화, 수협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협중앙회를 수산 분야 거점 지

역인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수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도시어촌 교류사업, 어업인 일자리 지원사업,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등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전남 어촌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이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1월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주된 사무소를 '전남도'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황지 기자

'첫 추경' 광주시 3월·교육청 4월 이례적 분리 추진

시의회 내달 임시회 개최 예정

광주시에 광주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이례적으로 분리 추진된다.

시는 3월에 조기 추경, 교육청은 당초 예정대로 4월 말~5월 초에 1차 추경에 나설 예정이다.

13일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3월 임시회 개최를 열흘 앞둔 다음달 3일, 시의회에 1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추경안은 4개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는 지난달 27일 올해 첫,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 광주전략회의를 통해 1차 추경을 3월에 조기 추진키로 합의한 뒤 예산담당관실, 세정과를 중심으로 세입 추계와

국비 확보액 가내시(假內示)를 바탕으로 조기 추경에 대비해왔다.

아직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에는 가뭄 극복과 함께 최근 제7차민생경제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2023 광주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들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시 올해 광주시 경제정책의 양대 수레바퀴를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로 정하고 "맞춤형 위기대응 경제백신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장·청년층과 노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위기 가정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주거·교통·생계 지원 범위를 늘리는 한편 소상공인 특별보증도 본예산 1000억원에 400억원을 더해 1400억원으

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진흥 전담기구 설립 △중소기업 위기대응 시스템 장착 △주력 산업 고도화와 산업 전환 △신산업 스마트팩토리 △신산업단지 확충과 투자인센티브 강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대학과의 협력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3월 조기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재정이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은 교육행정 고유의 일정상 3월 추경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예년과 같이 '4월 추경'을 준비 중이다. 제315회 임시회 개최 열흘 전인 4월17일까지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해나 기자